[특집]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

"연구·교육기능 포괄한 '自足도시'로"

각계 전문가 10인의 토론 요지

정부의 투자, 필수적인가

김원(건축가) — 출판단지의 구상에 대해 오늘 '환상적 도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여러번 나왔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 일은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영화계에서도 한국에 헐리우드 같은 것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영화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촬영소·야외세트·현장시설의 공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계획과 매우 흡사하다.

어떤 계획이든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계획은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 마련됐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그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도시재개발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거주민들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오히려 순수한 민간주도형의 사업이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배타적인 개발방책에 경종을 가할 수 있다.

또 강병기교수의 발표 중에 토지를 각 업체에 분양해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사유재산의 보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도 깊이 연구해야 한다.

김우창(고려대 교수·영문학) — 출판문화산업단지라는 거대한 구상이 아직 구체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야 정부의 지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조금 軟性化했으면 한다. 가령 출판업, 인쇄업, 출판종사원의 복지 등의 문제를 단위별로 설정,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전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많은 회사가 참여할 수 없으면 몇몇 회사라도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출판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공익사업적인 측면이 많은데, 공익의 차원일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우긍(서울대 교수·지리학) — 새로 생길 출판도시는 출판인들이 일하고 거주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볼 만한 곳으로도 작용했으면 한다. 신흥 산업도시인 구미·안산·창원 등을 가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이 출판문화의 도시는 정말 가볼 만한 관광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도시의 성격을 '自足的 도시'로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도시에 숙소를 마련하면 출판업계의 종사자들이 과연 지금의 거주지에서 이사하여 거기에 들어갈 것이냐의 여부도 큰 문제이다. 이것은 얼핏 보면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도시의 규모나 앞으로의 발전 여부, 심지어 도시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관련된다. 출판종사자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자족적인 도시가 되지 않는 한, 직장과 집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멀어지게 되며, 이주해간 업체마저 서울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발표자들은 또 '출판문화'쪽으로만 강조했는데, 한 도시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종류의 기능만으로 부족하므로, 연구·교육 등 다른 기능도 함께 구상했으면 한다.

최병두(대구대 교수·지리학) —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서울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 외곽에 출판도시를 만드는 것은 균형있는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은 정보·통신·문화산업이라는 점에서, 이 계획은 결코 환상적·도전적·돌출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출판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출판계가 문화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측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한편으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가급적 줄였으면 한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관련업체의 집중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제외된 군소 출판사나 지방 소재의 출판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서울의 도심지에서 사는 저작자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기획·편집상의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홍기선(고려대 교수·신문방송학) — 출판타운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거기에 가면 책 안사고는 못배기고 책 안읽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는데, 독자를 위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판도시 건설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모은 토론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정병규·최병두·허우긍·김우창·김원씨.

지금까지의 출판계는 참고서나 교과서 등으로 자라왔는데, 이제 출판타운을 건설하는 마당에서는 독자들의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과제

정병규(북디자이너) —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잘 만든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책은 단순히 개량적이고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하는 지고한 고집을 가진 존재이다. 아무리 돈많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읽는 것하고 비서가 읽어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기계화한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강병기교수가 얘기한 '복지의 차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출판계가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기는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토의를 더욱 구체화했으면 한다. 집을 어떻게 짓고 땅을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는 일반적인 경제원칙에 맡기면 되지만, 출판계가 특별히 추구해야 할 복지의 문제는 어떤 것이고, 그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선 출판계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형 출판문화도시를 만든다면 정부로서도 다음 정부에 넘겨줄 만한 거대한 문화적인 사업을 남기는 셈이 되므로, 우리는 좀더 당당해져야겠고 한편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권영빈(중앙일보 논설위원) — 처음 출판문화산업단지에 관한 기사를 보고 희한한 발상이다, 좋은 생각이다 하고 느끼면서,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땅과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하는 문제였다.

우선 땅이 100만~500만평, 기초공사비만도 1조가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대한 토지와 막대한 자금의 마련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를 구해야 하는데, 약 500여개의 출판관련 산업체만 모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출판인들이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더욱 포용력을 넓혀 다른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할 출판인들의 몫과 정부의 지원도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성완경(인하대 교수·미술사) — 이 계획을 보고 상당히 엄청나다는 느낌부터 받았다. 그러나 출판단지의 필요성이 출판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절실한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필자나 독자와 연관업체들의 인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김우창·정병규씨도 지적했듯이 책만들기는 역시 수공업적·연성산업적인 분야인데, 이러한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거기서 어떤 전략을 세워 나가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심지어 몇 사람만이 모여 간단하게 만들 수

김원일·백승길·성완경·권영빈·홍기선씨.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텐데, 생산과정을 집중시킨다는 이 계획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만약 출판단지를 만든다면 책만들기의 수공업적인 측면과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당히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백승길(유네스코 문화홍보부장) — 이 계획안을 보고 일본의 과학도시 쓰꾸바(筑波)를 생각했다. 그 도시의 중추는 쓰꾸바대학이다.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때 이 계획이 그렇게 환상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책을 만드는 데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최고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상업에 능숙한 사람과 단순한 기능공도 필요한데,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융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출판단지 전체를 박물관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출판행위를 박물관의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으면 한다. 일반 책, 古書, 인쇄자료, 인쇄기, 제지, 장정, 제본 등은 모두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출판계의 수준이 세계에서 10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우리 스스로가 쓰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영구보전할 수 있는 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열악한 독서환경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제작량이 많다고 해서 출판계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출판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실정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

김원일(소설가) — 주제발표자들은 "찬동한다,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말했다. 토론자들도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근간에 문인들이 모여 문인촌을 몇만평 규모로 만들어 박물관·학교 등의 문화시설을 마련하려다가 정부 지원의 부재로 실패한 적이 있다. 그런데 몇십만평 이상의 출판도시를 만든다 하니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출판문화의 거리'같이 소규모의 것을 만든다면 몰라도, 방대한 땅과 엄청난 비용이 필요할 텐데 더욱이 출판만을 위한 도시를 만든다면 과연 정부에서 투자할 것인가 하는 회의가 앞선다.

또한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 외곽에 있는 단지로 가는 것보다는 필자와 가까운 서울 도심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인쇄소 중에서도 기업체의 사보 등 단행본 이외의 인쇄물을 더 많이 취급하는 경우, 굳이 새로운 출판도시로 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출판업에 종사한지 오래되고 재고가 많아 창고문제도 심각한 출판사끼리 모여, 작은 규모의 그야말로 '단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주목(대광서림 대표) — 새로운 출판단지가 생기면 거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직원들의 복지문제와 사무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이다.

한편 정부 지원에 대한 문제가 여러번 나왔는데, 사실 출판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잘 해왔다. 정부의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구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힐 염려가 있다. 출판계는 '미운오리'여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영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 지나친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일부 출판사들이 모여 정부의 지원하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른 출판사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2차대전이 끝나기 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출판사들과 그렇지 않은 출판사들이 대전이 끝난 후 서로 분열되었던 일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출판도시의 건설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출판계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업은 공개적으로 추진"

이기웅(추진위원회 위원장·열화당 대표) — "너무 커진다"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결코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질적인 면에서 '제대로' 해보려는 것이다. 출판계에 누적돼온 문제들을 최대한 그리고 동시적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이 이제까지의 우리들의 사고력의 테두리 속에서 볼 때 커 보이는 게 아닐까 한다. 어떤 영향력있는 출판인 한분은, 규모를 천만평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선 우선 큰 출판사와 작은 출판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필자와 독자, 인쇄소 등 관련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인식과 사고, 발상의 차이를 줄어가면서 목표에 접근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는 몇가지 단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먼저, 출판계 내부의 의견을 통합하는 일이다. 현재 약 60퍼센트 정도의 내부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출판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 있어서 말이다. 자금조달과 사용이나 부지확보 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 조정해갈 수 있다고 본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각에 의존하는 면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가 출판 연관업체와의 의견조정과 전략상 합의하는 일이다. 출판은 매우 다양한 직종·연관업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인쇄소·제본소·제지공장·서점 그리고 출판기획자·디자이너·사진작가·일러스트레이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직종·업체들과의 견해차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출판계 내·외부의 의견이 조정되면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건축·지리·관리·회계·재정 등의 일을 직접 담당할 전문가들과 상의, 출판도시의 설계와 그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구도를 설정하고 실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에는 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김주목 사장의 "가급적이면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매우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출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과 관계된 문화사업이므로 정부와의 협조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시책에 구속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력을 떳떳하게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마지막 단계로, 이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정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과정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사업은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부동산투기를 경계하라는 주위의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 계획의 개발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출판사들이 대체로 창사 초기에 그만두는 이른바 '유아사망률'이 높다고 하는데, 현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출판도시의 건설은 오히려 출판사의 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집을 지어서 들어올 여유있는 출판사뿐만 아니라 세를 들어서 들어올 영세한 출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임무기간은 될 수 있는 한 단시일 내에 끝내고, 발기인대회를 열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기구, 즉 추진사무국이 탄생할 것이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조직체의 성격은 조합의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들을 하고 있다. — 정리·차창용 기자